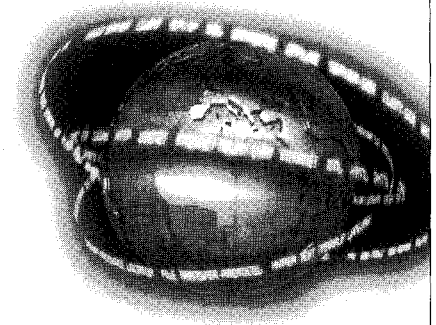




필리핀의 전력산업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국에 앞서 발전부문에 독립발전 사업자(IPP)를 도입하는 등 전력부문에의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전력산업 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전기요금의 저감 등을 목적으로 2001년에 전력산업개혁법(電力産業改革法)을 성립시켜 전력산업의 재편성에 들어갔다. 개혁일정은 당초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로요 대통령의 재임으로 이미 정해진 개혁 방향은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필리핀의 전력산업의 개요와 법 성립에서 3년이 경과한 개혁의 현황을 이하에 소개한다.

○ 전력사정

필리핀은 7,1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다음가는 도서국가이다. 이 때문에 주요 송전 계통도 루손, 비자야, 민다나오의 3개 계통으로 되어 있다. 2003년의 발전용량은 1,512.3kW이며, 그 안에 수도 마닐라를 둘러싼 루손 계통에 약 80%에 가까운 1,187.1만 kW의 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시점에서는 수력과 석유가 주요 전원이었으나 팔라완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가스전(田)이 발견된 것 등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하고 전원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열은 현재 세계 제2위의 규모로서 장래에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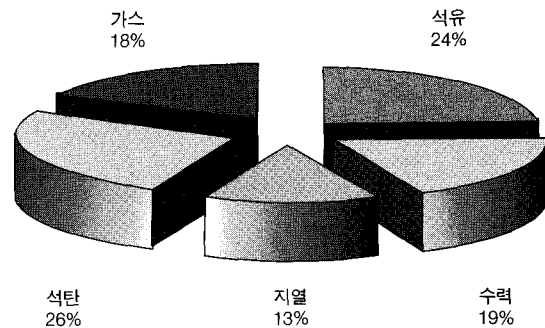
필리핀에는 '바라가이'라고 하는 최소 행정단위가 있으며, 2003년말 현재 그의 약 90%가 전화(電化)되어

있다. 나머지 약 4,200개의 '파라가이'가 전화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것을 2006년까지 모두 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는 가정의 90%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그때까지는 전력 계통에서 고립되어 있는 지역과 도서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신(新)·재생(再生) 에너지를 이용한 전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화(電化)의 진전도 있어, 정부의 전원 개발계획 2004~2013에 의하면 최대전력은 2003년의 850.9만kW에서 2013년에는 2배에 가까운 1,639.9만 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혹은 송전 등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의 투자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림 1_ 연료별발전설비비교 (2003년)



(자료) 에너지성 필리핀 전원개발계획 2004-2013



○ 규제완화의 현황

전력산업개혁법(공화국법 No. 9136)은 2001년 6월 26일 시행되었다. 그 때까지는 필리핀전력공사(NPC)가 전국의 발전·송정설비를 소유함과 아울러 IPP에서 전력을 구입하여, 마닐라전력회사를 위시한 민영 배전회사와 지방전화조합(地方電化組合)에 공급하여 왔다. 전력산업개혁법은 전력사업을 분할하여 시장개방과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 전기요금의 인하와 NPC의 채무 해소(債務解消)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NPC의 발전 자산과 부채는 전력부문 자산·부채관리공사(PSALM)에 계승되고 발전자산은 순차적으로 민영화된다. 또한 송전자산은 송전공사(TRANSCO)에 이관되며, 이것도 민영화된다. 또한 도매전력시장(WESM)이 설립되어, 이 시장을 통한 전력 거래가 실현될 예정이다.

발전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분류 등으로 시간이 걸렸으나 2004년 3월에 들어 수력발전소 1개소가 그 지방 기업에 매각되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수력발전소이지만, 개혁법 시행에서 2년 여가 지나 드디어 민영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송전자산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25년간의 운영권(컨세션 계약)을 부여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두 번에 걸친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채 끝나, 민영화를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WESM은 2003년 12월부터 시행(試行)을 개시하고 있으며 2005년 전반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의 도입에 따라 발전과 소매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져, 적절한 전기요금이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발전부문의 민영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여자가 한정되는 만큼, 전력산업의 재편성에는 민영화와 시장 도입의 쌍방이 원활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日本電氣協會발행 電氣協會報

● 그림 2 _ 새로운 전력체제

